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1996. 12.

김 도 태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요약

통일문제의 정치적 비중이 큰 우리사회에서 통일을 위한 정치과정의 중추기관인 정당의 역할은 전사회적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정당 기능에 관한 이론과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서독정당들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한국의 정당들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담당해 온 역할을 분석·평가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통일과정 진전에 따라 정당들이 추진해 나가야 할 단계적 활동모형을 제시하였다.

1. 서론

한국사회에서 통일문제가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은 매우 크다. 또한 정치권력배분에 참여하는 정당의 정치체계에서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통일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 전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한국정당의 역할을 설정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활동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은 현대정당의 역할과 독일통일 사례에서 나타난 정당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종래 한국정당이 담당해 온 역할을 분석·평가 하는 동시에 단계적인 통일과정 진행에 대응하는 정당의 역할모형을 설정한다.

2. 현대정당의 이론고찰과 사례연구

현대정당의 보편적인 기능은 정치권력과 대중의 연결기능 및 정당체제 유지를 위한 자율적 기능의 양자가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양자의 범주내에서 구체적인 정당기능을 열거해 보면 대중의 정치참여 촉진, 정치체제의 정당화 기능, 국민통합과 갈등관리, 정치교육과 같은 역할에 비중을 둘 수 있다.

한편 독일통일과정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 서독정당 역할의 특징을 남북한 통일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 차원에서 찾아 본다면 다음과 같다. 서독정당들의 이념적 다양성과 정책적 차별성이 동서독 사회간 이념적 괴리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서독 정치체제의 대외활동을 현실주의적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체계적 발전을 경험한 서독정당들은 통일과정 단계별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정부를 대신하여 동서독간 접촉,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켰다. 이 밖에 통일문제의 대중화도 정당역할의 결과였으며, 서독정당 체제의 다원적 성격이 동독사회의 분열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3. 한국정당의 역할수행 실태

통일을 위한 한국정당의 활동은 대체로 저조하였다. 대중여론의 수렴활동을 통해 본 사회통합 기능에서 한국정당들은 사회여론을

주도하는데 실패하는 등 사회통합 활동에서 수동적이었다. 통일 정책 참여과정에서는 차별화되고 독자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법활동 역시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문제 전문가 양성도 원만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대외활동과 대북한 접촉활동도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이념적 한계성에 직면하고 있어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정당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평가를 피할 수 없으며, 지나치게 보수화된 이념적 한계성과 낮은 수준의 제도화에 따른 역할의 미분화와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당활동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정당들간 사회계층적 차별성 부재, 인적·물적 토대 취약, 대정부 협조체제 구축 실패, 통일정책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4. 통일과정에서의 정당활동 활성화방안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통일이 현재의 분단상황 변화를 전제로 하며, 그 변화는 단계별로 진행되리라는 가정하에 정당활동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과정의 단계적 변화란 통일기반조성 단계에서 남북한 사이의 정치·이념적 대결양상의 변화, 남북연합 단계에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양지역 사회간 협력체제로의 변화, 그리고 통일이후 단계에서 남북사회간 동질성 회복으로

의 사회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은 위와같은 통일진행 단계별 변화를 모색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단계별로 대응되는 역할을 제시하였다. 통일기반조성단계에서 한국의 정당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활동으로는 정당의 자율성 제고 모색, 대중여론의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 대안마련, 정당주도의 통일교육, 남북간 정치인 교류 추진, 정부의 외교활동을 보완하는 정당의 대외활동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남북연합단계에서 예상되는 정치상황과 연계하여 정당이 추진해야 할 활동으로는 통일의 필요성 홍보강화, 통일추진과정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사회의 다원적 이념 수용을 위한 정당이념 수용 폭의 확대, 남북 사회·정치조직간 교류확대, 북한정당 지원 활동, 대북한 주민 홍보활동 수행, 통일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주변국 외교활동 강화 등이 포함된다.

한편 통일이후 사회에서 정당은 통일사회 발전방향 제시, 통일사회 내 갈등의 조정, 북한지역 주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지원, 통일된 정치체제에서 필요한 정치엘리트 충원, 시민의 통일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화교육 실시, 통일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대외외교활동 등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현재 한국의 정당들은 향후 진행될 통일과정에 대응하는 체계

적이고 합리적인 활동계획을 준비할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정당들은 시간의 흐름과 상황 변화에 따른 정당의 역할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당의 활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통일과정의 점진적 진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 I 장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대상과 범위	3
가. 연구대상	3
나. 연구범위	5
3. 연구방법	7
제 II 장 정당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사례연구	9
1. 현대정당 역할의 이론적 고찰	9
2.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정당활동 사례	13
가. 서독정당의 역할 실태	13
나. 시사점	30
제 III 장 한국정당의 역할수행 실태	34
1. 한국정당의 통일을 위한 활동	34
가. 사회내부 체제유지	34
나. 통일관련 대외외교	51
2. 정당역할 평가와 문제점	56

제 IV장 통일과정에서의 정당활동 활성화방안	61
1. 통일과정	61
가. 통일전 단계	61
나. 통일이후 사회상	63
2. 통일과정 단계별 정당의 역할	65
가. 정당의 역할수행 준비조건	65
나. 정당의 역할	67
제 V장 결 론	82
참고문헌	85

제 I 장 서 론

1. 문제제기

동서냉전의 결과로 분단을 경험하게 된 한국사회에서는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양상에 따라 통일문제에 있어서 안보 및 외교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는 냉전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중심적인 배타적·폐쇄적 정책이 선호되었으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보편적·개방적 방향으로의 통일 논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였다. 즉 사회 각분야의 구성원은 통일문제에 관해서 각자의 사회내 역할비중에 따라 차별되어 왔으며,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통일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남북한간에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과제들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¹⁾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통일과제의 민족적·역사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국민참여라는 보편성과 개방성이 적절한 논리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공에 따라 얻게된 자신감 증대의 결과이며, 정치발전의 결과로 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

1) 최근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한 쌀 제공문제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민간기구들의 참여 및 지지는 점차로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보이며, 민간기구들의 역할 설정 및 분화의 실제적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정치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정권의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여 존재하는 정당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치체계에 미치는 정당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그 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사회변화에 능동적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정치참여 통로역할을 담당하는 정당들의 통일정책 참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중의사 반영과 결정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획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정당의 성격으로 인하여 남북문제가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이 큰 우리 국내정치 상황에서 정당들의 통일과정 참여문제는 전사회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당의 역할 수행정도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통일문제 접근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정당의 역할과 독일통일사례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근거로 종래 한국정당이 담당해 온 역할의 분석과 평가, 그리고 향후 통일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한국정당의 역할을 설정하고 활동추진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2. 연구대상과 범위

가. 연구대상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한국사회는 사회구성원의 다원주의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존중하여 다수 정당의 출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정치체계에서는 많은 정당들이 출현하였으며, 특히 선거시점에서 출현소멸해 가는 정당들을 고려하면 한국정당의 범주는 매우 포괄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가운데 연구대상으로서의 정당의 수를 축소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대상선정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선정의 기준으로 정당의 정치참여 능력과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를 고려하기로 한다. 정당 선택 기준의 하나인 정치참여 능력은 정당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 다당제를 실시하는 한국정치상황에서 다수 정당들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은 각자 다를 수 밖에 없다. 즉 세력이 강한 대규모 정당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은 무시될 수 없는 반면, 소규모 정당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도 정당의 차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바, 정당의 정치참여 능력을 기준으로 대상범위를 제한하도록 한다. 정치참여 능력은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나, 연구의 편의상 의회에서의 교섭단체 자격 유무를 통해 이해하기로 한다.

한편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도 한국정당 가운데서 연구대상을 선택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변수의 하나이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동서냉전 논리에 의해 한반도 분단 상황이 영향을 받고 있는 동안 존재했던 한국정당의 역할은 획일화된 이념중심 사회구조의 산물일 수 밖에 없었다. 더우기 남북한간 이념대결 구조 속에서 냉전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성격은 정당의 존재는 물론 역할마저 규정짓게 된다.

그러나 탈냉전 시기의 도래에 따라 한반도 문제도 이념 중심적 상황에서 민족문제, 혹은 평화구축 문제로 초점이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정당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은 탈이념적 성향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당들의 역할이 통일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했으리라고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의 역할은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역할로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다. 결국 연구의 진행을 위해 선택되는 정당의 범주도 탈이념 시대의 정당으로 한정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여기서는 동서냉전이 끝난 1990년대의 한국정당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한국정당의 범위는 1990년 이후 의회내에서 교섭단체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정당들로 한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당으로서의 민자당과 신한국당, 동시대의 야당들인 14대 총선거 시점에서의 민

주당과 국민당, 그리고 15대 총선거 시점에서의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이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정당들은 연구 편의상 한국사회에서의 정당역할 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선택되는 것인 바, 실제로 연구진행 과정에서 한국정당의 일반적(보편적) 역할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제한된 대상과 범주를 뛰어 넘어 확대된 대상을 함께 취급하도록 한다.

나. 연구범위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설정될 연구범위는 ‘통일과정’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제한된다. 즉 통일과정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연구의 방향은 물론, 연구의 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통일과정’의 의미는 광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분리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회가 어떻게 통합을 이루는가에 따라 통일과정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당역할을 검토하기 위하여 통일과정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바, 정당의 역할도 통일과정의 복잡성에 따라 비현실적 부분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합방법을 대별해 본다면 ‘일방의 강제적 흡수’ 방법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 가운데 쌍방 합의에 의한 통합’ 방법

으로 이분화 시켜 볼 수 있다. 통일과정은 이러한 통일방법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며, 상이한 통일방법에 의해 나타나는 통일과정의 복잡성과 현실적인 접근 가능성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와 주민대중 사이에는 강제적인 흡수방법에 의한 남북한간 통일은 배제되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방적인 흡수통일 방법하에서의 통일과정과 정당역할은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²⁾ 또한 이 방법은 정부와 같이 책임 있는 당사자의 배타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와 역할이 전제가 되어야 함으로, 정당의 개입 혹은 참여의 여지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흡수통일의 방법에 따른 통일과정은 현실적인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남북한 양자가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상호 합의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일방법은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합의통일」 방법의 내용이 되고 있다.³⁾ 이러한 통일방법 하에서는 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다양한 통로를 통해 비정부조직과 민간기구들의 역할이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국정당이 갖는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통일의 의미로서 위에서 두번째로 언급된 「합의에 의한 통일방법」을 선택적으로 고

2) 전쟁에 의한 강제적 통일방법은 여기에 포함된다.

3) 독일통일은 일방의 타방흡수 성격과 장기간의 동질화과정을 거친 합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분류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필자는 정당의 역할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흡수통일이 아닌 쌍방향의 통일의 형태로 간주·분류하기로 한다.

려하기로 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통일과정은 분리된 사회 사이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합의를 이루는 장기적 접근과정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시간의 정지 상황이나 상태라기 보다는 사회이념과 사회상황의 일련의 변화를 가리키는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과정을 구체적으로 상황변화와 연결지어 이해한다면 변화의 초기단계로부터 변화의 종료단계까지 전과정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단계성을 고려하여 통일과정 역시 통일이전의 통일기반조성 단계, 통일추진단계, 통일이후 사회통합단계로 분류·이해하고, 정당의 역할은 통일과정의 단계성에 맞추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연구방법

‘한국정당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연구방법과 관련지어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시점에서 한국정당들이 수행하고 있는 통일활동 실태를 살펴 보고, 분석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다만 연구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한국정당들의 활동평가는 올바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미 위에서 살펴본 독일 통일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 부각에 초점을 둔다.

둘째, 통일과정에서의 정당활동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의

통일과정에 단계성을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통일 과정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현재 시점만이 아니라 미래의 통일추진 과정 및 통일 이후 시기의 사회통합과정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과정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현재로부터 본격적으로 통일이 추진되는 미래의 시점까지를 통일기반조성단계, 통일달성 시기를 통일추진단계, 통일 이후 시기를 사회통합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정당활동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셋째, 통일단계별로 필요한 정당의 역할을 현대정당의 역할과 연계시키는 부분이다.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각 단계별로 중시되어야 할 현대정당의 역할 설정문제와, 정당이 수행하는 각 역할들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통일과정에서 정당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내부 체제강화기능과 대외외교활동으로 그 범주를 구분하기로 한다. 또한 각각의 범주내에서 다루어야 할 연구 지표로는 사회내부체제 강화기능 부분에서 대중의 여론을 주도하는 정당의 사회통합기능, 통일방안과 통일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통일정책 참여기능, 사회내의 통일교육과 통일문제전문가 양성 등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고, 대외활동으로는 외교정책 마련 및 외교활동, 대북접촉 활동을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통일축진을 위한 한국정당의 역할방안을 분석·제시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통일과정의 단계성과 정당의 역할을 연계시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 II 장 정당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사례연구

1. 현대정당 역할의 이론적 고찰

정당의 기능 혹은 역할의 개념은 일반적 사용사례나 사전적 의미로 보아 '정당의 활동'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매우 불확정적이어서 정당이 수행하는 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 즉 정당의 기능이 단순히 활동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 여기에는 정당의 목적성과 부합하지 않는 의미없는 행동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의 활동 중에는 정당의 내부구조를 유지해 주고 정당내 통합을 촉진하는 활동에만 정당기능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의 활동은 정당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한정적 활동만이 정당기능 개념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에 따른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활동이라는 정당기능 개념의 테두리 내에서 현대정당이 추진하는 활동에 관해서는 수 많은 학자들의 경험적 제안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C. Merriam의 경우 정당의 활동은 공직자의 선출, 공공정책의 수립, 정당구조의 유지, 정치교육 실시, 주민과 정부간 의견조정 등 5가지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¹⁾ Merriam이 정당의 활동을 이처럼 다양하게 나누고 있는 근거는 정당의 본질이 이미 고전적 의미의

1) Charles Merriam, *The American Party System* (New York: Macmillan, 1923), pp. 391~405.

이익집단적 성격을 뛰어넘는 공적 조직임을 인식하는데서 나온 것이다.

Merriam이 다양한 정당활동을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V.O. Key는 정당의 대표적인 역할로 대중의 의사를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들었다.²⁾ 즉 Key의 경우 정당의 의미있는 활동으로 주민여론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할로서 정당이 갖는 본질적인 기능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정당이 전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치조직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Key의 경우와 같이 Schumpeter나 Downs도 정당의 기능으로 정권획득이라는 한가지의 대표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³⁾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중의 여론을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기능 및 여타의 정당활동이 모두 정당의 집권에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정당의 역할은 정당의 본질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로 상이하게 언급될 수 있으며, 정당의 활동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의 성격을 보는 견해와 밀접히 연결되게 된다. 다만 정당의 본질이 정권의 획득에 있다고 보는 견해와 정당의 공공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 사이에서 포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견해를 참작한다면, Rossiter의 정당에 대한 이해를 존중할

2) V.O. Key, *Public Opinion and American Democracy* (New York: Alfred A. Knopf, 1961), p. 33.

3) Joseph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75), pp. 269, 283;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57), p. 28.

수 있다. 그는 정당의 성격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조직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주된기능으로서 권력에 대한 통제와 투쟁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⁴⁾

Rossiter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많은 학자들- Neuman, Fishel, Kolbe, Almond 등-의 견해 역시 본질적으로 정당의 의미와 역할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는다. Kolbe의 경우 '정부의 정통성 부여 및 정치체제 통합'에 대한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⁵⁾ Lapalombara는 '이념과 정책목표의 동질화 및 정부구성'을 정당의 주요역할로 인식하였다.⁶⁾ 또한 Almond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언급하고 있으며,⁷⁾ 일단의 한국학자들에게서는 '이념적 확산'에 대한 정당의 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⁸⁾

따라서 이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현대정당의 보편적 활동을 보면 대체로 정당의 공적 조직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에 동의하는 가운데 대중과 정치권력 사이의 연결기능과 정당 스스로의 자율적 기능의 양자가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전자의 경우 주민의 정치참여나 사회적 갈등의 조정, 그리고 정치교육을

4) Cliton Rossiter, *Parties and Politics in Ameri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60), pp. 38~39.

5) Richard L. Kolbe, *American Political Parties: An Uncertain Futu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85), pp. 6~7.

6) Joseph Lapalombara, *Politics Within Nation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4), p. 547.

7) Gabriel A. Almond (ed.),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 (Boston: Little Brown, 1974), pp. 93~94.

8) 김하룡 외, 「정치학원론」 (서울: 박영사, 1982), p. 134.

포함하고, 후자의 경우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기능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지지 혹은 견제, 대외정책의 개발, 정치엘리트 충원, 정치적 과제 설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의 기능은 궁극적으로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주민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여 정권의 교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확연하게 구별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대정당의 보편적인 역할은 이들을 함께 이해하되, 내용별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현대정당의 역할을 정치체제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기능적 분류를 따르기로 하고, ①대중의 정치참여 촉진, ②(정치체제 혹은 정부의) 정당화 기능, ③국민통합과 갈등관리, ④ 정치교육 등 네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⁹⁾

이들 각각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도록 한다. 대중의 정치참여 유도 기능은 정치조직의 확충과 각종 집회 및 선거활동을 통해 일반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가리킨다. 또한 정치권력의 정당화 기능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임과 지지를 바탕으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존재의 본질적 기능을 가리킨다. 다만 여기에는 정당이 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국민통합과 갈등관리 기능은 정당이 사회의 각집단과 세력들을 조정·합의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9) 배성동, “정당과 정치발전” 이영호 외, 「현대정치과정론」 (서울: 법문사, 1978), pp. 297~302.

정치교육 기능은 정치사회화 기능으로서, 정당이 당원의 자질향상과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2.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정당활동 사례

가. 서독정당의 역할 실태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당의 역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과정 단계별 역할과 역할 분야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단계별로 통일기반조성단계와 통일추진 과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통일 이후 단계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등으로 나누어 보기로 하며, 분야별로 정치체제 내에서의 국민합의 모색, 대동독 접촉 및 교류 현황, 그리고 대외 외교에서의 역할 등을 정당역할과 연계시켜 본다.

(1) 통일기반 조성단계에서의 서독정당 역할

통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서독정치 체제 내부에서 정당들이 갖는 기본입장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당위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정당들간에는 통일방법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을 위해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서독정당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서독정당들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분단 이후 기민당 정권하에서는 물론, 1960년대의 「大聯政」하에서도 공산주의 이념을 금기시했던데서 나타난다. 서독내의 공산당(KPD; German Communist Party)은 1956년 그들의 활동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래 1968년 베를린에서 DKP(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로 새로이 창당을 하기까지 엄격히 통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조치에 대한 서독정당들의 지지는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¹⁰⁾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서독정당들의 공통적인 반대 성향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당들간의 통일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는 현저하였다. 특히 이념문제에 관한 정당들의 입장은 서로 달랐는 바, 기민당(CDU; Christliche Demokratische Union)과 사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간의 이념적 차이는 물론 자민당(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의 입장도 兩大정당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민당의 경우 동서간 이념대결 구도를 수용하는 가운데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 적대적 입장에 서 있었다. 따라서 기민당은 통일에 대한 기대도 장기적으로 미래에나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여 직접적으로 공산당과의 타협은 배격하는 강경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기민당의 공산주의 배격정책은 1980년대에 이르러 당내 지도층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¹¹⁾

10)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p. 150.

11) 위의 책, p. 120.

반면 사민당은 통일의 어려움과 공산주의 이념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기민당과 같았으나, 독일의 평화보장에 보다 큰 관심을 두어 동독과의 협력관계를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¹²⁾ 이러한 신축적인 태도는 사민당으로 하여금 동독주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독의 내정간섭이나 직접적인 개입에는 반대하는 이념적 중립성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민당은 자유주의를 표방하여 독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유럽에서의 평화구조 창출에 관심을 두었다.¹³⁾ 이처럼 독일 외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방한 자민당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여타의 정당보다 이념적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넓은 것이었다. 즉 자민당은 통일문제를 다루지 않고도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이념적 모순과 갈등없이 대동독 접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독사회가 정당사이에 정치이념의 다양성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허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원주의적 사회구조를 다당제의 발전을 통해 수용하는 가운데, 차별화된 정당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분단국가의 구조적 문제인 정치이념의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다원주의 정치이념 선호로 인한 사회질서의 혼란발생 가능성은 정당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보장으로 통제될 수 있었다.

한편 독일 정당들의 대동독 접촉 및 교류는 분단 이후 지속적

12) 위의 책, p. 121.

13) 위의 책, p. 122.

으로 추진되었다. 독일정당들의 대동독 접촉에 대한 기본입장은 국가체계의 상이성과 통치이념의 상반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인적교류와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분단에 따른 정치적 편견의 발생과 군사적 긴장관계를 축소·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서독의 정치인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었으며, 이를 위해 양지역 정당들의 접촉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독일정당들은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실제로 서독의 기민당, 사민당, 그리고 자민당과 녹색당(Green Party)들의 일련의 대동독 접촉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본입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사민당의 경우 동독 공산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사회주의통일당)과의 관계와 평화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공존인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대동독 교류를 수행하였다.¹⁵⁾ 특히 서독 사민당은 동독의 독립적 지위에 대한 법적 인정을 주장하고, 나아가 동독의 안보이익을 존중함으로써 독일통일에 대한 적극적 희망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사민당의 공식적 입장이 동독에게 있어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사민당과의 교류에 응할 수

14) 다만 동독 공산당 정부는 동독정당들의 대서독교류와 접촉에 대해 경계하였으며, 접촉의 목적을 통일전선전술 차원에 두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서독정당들의 교류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제로는 제한적 상황에서만 접촉이 가능하였다.

15) 분단이전 동독지역의 사민당은 동독 공산당(SED)의 집권 이후 공산당에 흡수되었으며, 소수의 지도자들만 서독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였다. 따라서 동독내의 사민당계열은 공산당의 일부를 구성하여 왔으며, 동독 공산당은 서독정치체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민당과의 연결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있게 만든 요인이었다.

사민당은 1970년대에 브란트정부의 동방정책과 뒤이은 동구와의 새로운 안보협력관계 추진 이후, 1980년대에 있어서도 분단국의 평화문제를 약소국간 공동안보의 개념으로 다루었다. 에곤 바(Egon Bahr)가 주장한 공동안보의 개념은 ‘핵전쟁 회피를 위해 적대자에 대한 동반자 지위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¹⁶⁾ 사민당은 이러한 공동안보의 개념하에 당차원에서 동독정부와 협상함으로써 그들의 역할에 대한 서독주민의 인식을 새로이 하게 만들었다. 사민당은 양독간의 관계가 경쟁을 통한 양지역 이데올로기의 파괴로 연결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개혁을 통한 양지역의 점진적인 접근만이 분단하에서 상호생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동서독간 관계의 부정적 경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사민당의 이러한 대동독교류 노력은 1987년 동독 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의 관리하에 있던 동독정부와의 공동백서 발표에 합의함으로써 절정을 이루었다. 사민당이 당차원에서 동독정부와 공동으로 채택한 白書는 서로 다른 양지역 체제내 정당들의 이념적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동서진영간 투쟁을 평화적 체제경쟁으로 정의하여 양독간 관계를 이념적 대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¹⁷⁾

16)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 126.

17) 사민당의 공동백서 참여는 통일과정에서 사민당에 강점과 약점으로 동시에 작용하였다. 강점으로는 사민당이 대동독주민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이며, 약점으로는 동독체제에 대한 인정조치로 말미암아 통일과정에서 동독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제한하는 장애근거

자민당(FDP)의 교류는 사민당의 경우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 바, 동독지역에서 동독자민당이 공산당의 위성정당으로나마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양지역의 자민당간 접촉및 교류는 다른 정당들보다 앞서 1956년 이미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66년 사민당과 동독공산당 사이에 연사교류 문제가 논의될 때 동서독 자민당간에는 실제로 3명의 대표를 초청·교환하여 토론회가 이루어진 바 있었다.¹⁸⁾

1982년에는 동독자민당이 바이마르 당대회에 업서버자격으로 서독자민당 대표를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자민당은 동독 대표를 초청하므로써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⁹⁾ 양당간의 교류는 지구당차원의 도시들간 자매결연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민당들간의 교류는 동독공산당에 의해 대서독 로비의 통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기민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이념적으로 강경한 반공산주의 입장에 서있었으며, 실제로 1985년에 이르기까지 당론으로 공산당과의 접촉을 거부하였다.²⁰⁾ 특히 동독지역에 동독기민당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민당은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다만 집권시 정부차원에서 양독 지도자들간 접촉을 갖는 정

로 작용한 것이었다. Peter Pulzer, *Germ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156.

18)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 122.

19) 위의 책, p. 123.

20) 기민당의 대동독 접촉 사례로써 1986년 부당수 로타슈페트가 개인자격으로 동독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에도 당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지도자 접촉만이 이루어졌다.

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기민당도 당조직의 하부구조인 지방행정 차원에서 동독지역과의 자매결연은 허용하였으며, 종교차원에서 동독지역의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도 하였다.²¹⁾

뒤늦게 1980년에 등장한 녹색당의 대동독지역 정당조직들과의 접촉은 다른 정당들과는 다르게 이루어졌다. 즉 동독에 녹색당과 연계성을 갖는 정치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녹색당의 관심 사항인 환경, 평화, 인권, 안보, 특수폐기물 처리문제, 외국인 망명자 문제 등을 대상으로 동독의회에 대해 개인별 대화창구를 마련하였던 것이다.²²⁾ 녹색당은 특히 동독지역내의 평화·환경운동 권 단체들과의 접촉 및 이들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데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녹색당의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동독지역의 반정부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정당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대외외교는 기민당의 아테나워 정부 외교정책과 사민당 브란트정부의 신동방정책 선택 사이의 전환과정이 두정당 사이의 이념과 정책의 차이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이다. 1950년대의 아테나워의 기민당 정부는 동독불인정 정책과 서유럽으로의 통합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소련의 팽창주의를 경계하고, 서독의 경제회복과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 중심의 서유럽체제로의 편입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테나워의 기민당 정

21) 1996.6.27 서독 기민당 소속 연방의원 Editha Limbach와의 면담에서 확인된 사항임.

22) 위의 책, p. 145.

부 외교정책은 냉전시대의 대결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서독의 안정과 평화보장 정책이었으며, 또한 통일을 장기적인 문제로 보는 데서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분단관리 정책이었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 미·소간 평화공존이 이루어지는 등 동서간에 데탕트 관계가 성립하게 되자 서독사회는 안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1963년 에르하르트로 이어진 기민당 정부는 동구와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한 동방정책을 선택하는 등 변화의 자세를 보였다.²³⁾ 그러나 에르하르트 정부의 외교정책 기본목표는 여전히 냉전적 논리하에서의 동독봉쇄에 있었던 바, 이는 동구지역에 대한 서독의 관계를 개선하여 동독을 고립시키고 동독의 대서독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민당 정부의 대동독 봉쇄정책은 동서독간 대화를 촉구하는 여론과 사민당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특히 동독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동방정책이 대동구접근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서독사회는 기민당을 대신하여 새로운 대동구 접근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적 정부의 출현을 기대하게 되었다.²⁴⁾ 결국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1967년에는 할슈타인 원칙이 폐기되고, 소련의 유럽긴장 완화정책 선택을 계기로 1969년 독일사회에서는 대동구 평화정책을 선호하는 사민당정부가 탄생하였다.

23)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42.

24) 브란트의 동방정책 배경을 서독의 대동독관리 차원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한 내용은 김학성, 위의 논문 참조.

1966년부터 1969년 까지의 大聯政을 발판으로 1969년 등장한 브란트의 사민당 정부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대동유럽정책을 종래의 대서방정책과 동등한 위치에 뒀으로써 서독의 외교적 지위와 활동의 폭을 넓혔다.²⁵⁾ 특히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은 서독이 미·소간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인 대동독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독일통일과정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분단국인 독일이 외교정책에서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당들간의 정책적 차별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일국민들이 정당간 정권교체를 선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당의 역할로서 지속적인 상호 견제와 비판이 이루어진 사실을 들 수 있다.

한편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은 1980년대에 이르러 집권하게된 기민당 정부에 의해서도 계승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외교적 선택과정에서 기민당 지도자들이 보여준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원인이겠으나, 또 다른 이유는 두개의 집권정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정의 상대가 되었던 자민당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양 집권당의 정부하에 계속해서 외무장관직을 역임한 자민당의 쟁서 당수는 신동방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집권당의 교체과정에서도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²⁶⁾ 이러한 자민당의 선택과 역

25) 위의 책, pp. 44~47 참조.

26) 김학성, 위의 책, p. 58.

할은 결과적으로 독일통일에 필요했던 소련의 양보를 이끌어 내었으며, 나아가 동독의 대서독 개방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달성과정에서의 정당역할

통일추진 과정에서 서독정당들의 역할은 대체로 통일방법 논의의 대중화와 동독지역 정치세력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전자의 역할은 통일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정치절차 행위였으며, 후자의 역할은 동독지역 주민의 정치소외를 막고 참여를 유도하여 통일을 촉진시키는 역할이었다.

통일방법에 대한 논의는 1989년 동독지역에서의 주민이주와 베를린 국경개방 이후 본격적인 통일분위기 도래에 맞추어 시작되었다. 특히 정치이념상으로 다원주의적 성향을 보이던 서독 정당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차별적인 지지확인을 통해 주민다수의 의사를 통일과정에 반영하려 하였다.

정당들 사이에 대안으로 논의된 독일통일은 세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내용과 지지정당을 보면, 첫째로는 녹색당이 이미 주장해 온 연합방식의 양독관계 정립방안을 들 수 있다. 이는 양독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독일의 통일을 동·서독 사회의 개혁이 이루어진 후로 미루자는 방안이었다.²⁷⁾

27)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 144.

둘째로 논의된 방안은 사민당이 주장한 과도기적 통일준비 기간설정 방식이었다.²⁸⁾ 서독내 노동자, 피고용자 계층의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민당은 동서독 통일에 따라 발생하게 될 서독내의 사회보장제도 손상, 주택난 및 임대료 상승, 실업발생, 임금하락 등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사민당으로서는 서독사회에서의 지지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동독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통일을 지연시키는 가운데 동독의 경제 발전을 모색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셋째로는 기민당의 방안으로 동독의 서독편입을 통해 동독의 재건을 전체독일사회의 문제로 수용한다는 견해였다.²⁹⁾ 따라서 기민당의 방안은 즉각적인 통일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서독의 부유한 생활을 동경하는 동독지역 주민의 지지를 발판으로 즉각적인 독일 통일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통일방법에 대한 정당들의 견해는 동독지역 총선을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의 지지 여부를 확인받았으며, 통일 이후 총선 결과를 통해 독일 전주민의 추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정당별로는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지지 과정을 거침으로써 통일독일체제가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일방법에서의 정당역할은 동서독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선택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체제안정화에 도움

28) 통일원, 「독일통합실태연구」, (서울: 통일대비특별정책연수단, 1992), p. 36.

29) 위의 책, p. 38.

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당은 동독정당과의 협력 및 통합과정을 통해 동독주민에 대한 정치참여 유도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9년 이후 추진된 독일통일 추진 과정에서 서독의 정당들은 동독의 시민조직이나 종교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동독정당들과의 연대를 통해 동독지역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기민당의 경우 일차적으로 동독지역의 정당이 아닌 사회조직 및 종교조직과 연계를 시도하였다. 기민당으로서는 통일추진과정에서 공산당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아 어떠한 공산주의 이념조직과의 협력도 거부하였는 바, 동독의 정당들 가운데 서독의 기민당과 연결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갖고 있던 동독기민당(CDU)과 민주농민당(DBD)이 공산당(SED)의 외곽조직(block party)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독기민당이 공산당으로부터 독자노선을 선언하게 되자 서독기민당은 양정당 협력을 공식화(1989.12)하고, 본격적으로 이들을 지원하여 1990년 3월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서독기민당은 동독기민당이 선거에서 고전하게 되자 민주농민당, 독일사회동맹(DSU), 동독민주 계몽조직(DA) 등을 끌어들이어 동독기민당과의 연합세력으로 선거에 임하도록 하였다.³⁰⁾ 결국 선거에서는 서독기민당의 지원을 받은 동독기민당 연합조직이 사민당과 민사당(PDS; SED의 後身)을 물리치고 동독지역 제1당(48.15% 지

30) 위의 책, p. 33.

지을 획득)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³¹⁾

사민당의 경우 분단시기에 공산당과의 연대활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지역에 그들과 연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에 사민당은 위성정당 지도자들 중 일부가 공산당을 이탈하여 새로이 창당한(1989.9) 동독내 사민당을 지원하여 1990년 선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동독 사민당이 21.84%의 유권자 지지율을 획득함으로써 기민당과의 대결에서 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³²⁾ 이러한 결과는 사민당의 통일정책이 잠정적인 준비기를 두는 즉각적 통일 반대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동독지역내 사회주의 지지성향을 갖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민사당(16.33% 지지율 획득)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거실패 결과는 이후 전독총선에서 사민당이 기민당에 패배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서독 사민당의 대동독지역 활동은 동독공산당이 동독지역에서 조차 소수정당으로 전략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즉 사민당의 활동은 사회주의 이념에 익숙해 온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공산당 외에 사민당이라는 사회주의 정당 선택 대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한편 자민당은 종래 자유주의 이념하에 독일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동독 접촉을 활발히 해 온 사실을 토대로 통일 시점에

31) Peter Pulzer, *German Politics*, p. 161.

32) Ibid.

서 동독지역의 자유민주당(LDP), 민족민주당(NDPD)과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자민당의 지원하에 선거에 참여한 동독지역의 자유민주연합세력은 5.28%의 지지율을 획득하였으며,³³⁾ 이러한 지지율은 서독의 소수정당인 자민당이 통일 이후 대동독지역 거점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동독지역에 이념적으로 연계성을 갖는 정치조직이 없었던 녹색당의 경우에는 동독지역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 및 인권단체들을 지원하였다. 이들 동독지역의 지식인계층은 동독 공산당 정권의 붕괴에 직면하여 사회주의체제 유지 및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서독과의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동독에 대한 자주적 국가지위를 인정하여 조속한 통일을 반대해 온 녹색당은 동독지식인과 연대가 가능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서독 정당들의 통일방법 대안의 제시와 통일과정에서 동독정당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 통로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은 독일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서독정당들의 대동독정치 세력과의 연계시도는 양독간 이질성 및 양독사회 대중의 분단정서를 축소시키는 것이었으며, 양지역 주민 다수가 지지하던 통일요구를 고무시키는 정치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지지계층 기반이 서로 다른 서독정당들의 대동독정당 지원은 결과적으로 동독사회의 계층화 현상에 대응하는 정치적 선택이 되었으며, 서독정당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별적 태도 역시 서독사회의 동독사회 합병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33) 통일원, 「독일통합실태연구」, p. 34.

(3) 통일이후 사회통합단계에서의 역할

총선거에서의 협력방식을 통해 동독의 정당들을 통일정치체제에 참여시키려고 한 서독정당들의 노력은 동독지역 주민들의 독일연방사회 편입과 정체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0년 12월 실시된 독일연방 총선거에서는 동서독 양지역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당들이 승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독지역 주민들이 연방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서독 정당들의 동독지역 진출이 동독주민들의 정치참여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1990년 선거결과를 보면 서독 기민당의 경우 동독의 기민당과 연합하여 선거에 참여하였으며, 선거결과 43.8%의 득표율과 전체 662석 중 319의석을 획득함으로써 강력한 1당의 위치를 굳힐 수 있었다.³⁴⁾

또한 자민당의 경우 11.0%의 득표율과 79석이라는 다수의석을 획득하였는 바, 이러한 결과는 동독지역에서의 약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선거 당시 자민당원 분포를 보면 동독에서의 정당원 숫자가 서독에서의 그것보다 더 많았다.³⁵⁾

반면 사민당은 동독지역에서의 패배로 전체적으로는 33.5%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239석), 이는 기민당 연립정부에 대한 견

34) Oscar W. Gabriel (Hrsg.), *Die EG-Staaten im Vergleich* (Westdeutscher Verlag, 1992), p. 595.

35) <도표 1> 참조.

계세력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³⁶⁾ 동독지역에서 사민당의 실패는 공산당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의 부상과 연결되어 있었다.³⁷⁾

녹색당의 경우 동독지역의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의 동맹인 'Bundnis 90'과 연합하여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동서독간 통일에 반대했던 녹색당 연합세력은 단 1석도 획득하지 못하였는데,³⁸⁾ 이러한 결과는 통일에 따라 독일국민들의 정치성향이 바뀌는데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였다.

위에서 살펴 본 선거결과는 급진적인 통일을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 동독지역 주민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사회에서 선거와 함께 정당이 주민의 의사표시 통로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통일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킨 녹색당과 사민당에 대한 주민의 지지 혹은 반대 의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독주민의 선거참여와 선거에서 나타난 영향력은 통일독일 사회에서 양지역 사회의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는데, 이처럼 통일 후 동독지역 유권자들이 통일독일의 정치체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서독 정치구조가 경쟁하는 정당이 존재했던 다당제였기 때문이었다.

36) 기민당 의석수와 비교하여 본 1980년대 사민당의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1980년; 224:254(전체의석수 519), 1983년; 228:237 (520), 1987년; 193:234 (519), 1990년 319:239 (662). 한편 기민당과 연합해 온 자민당의 의석수 변화는 54(1980), 35(1983), 48(1987), 79(1990)으로, 1990년 선거에서 많은 증가를 보였다. Oscar W. Gabriel (Hrsg.), *Die Eg-Staaten Imvergleich*, p. 595.

37) 민사당이 2.4%의 지지를 얻고 사민당과 사회주의 지지계층을 공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8) op. cit.

<도표 1> 정당원 수 변화(1900~1994)

	31.12 1990	31.12 1991	31.12 1992	31.12 1993	31.12 1994
CDU: 기민당					
서독지역	658.411	641.454	619.579	601.549	593.697
동독지역	134.409	109.709	94.267	83.794	77.800
계	792.820	751.163	713.846	685.343	671.497
SPD: 사민당					
서독지역	919.129	892.657	860.214	835.480	821.549
동독지역	30.421	27.214	25.744	26.000	27.725
계	949.550	919.871	885.958	861.480	849.374
FDP: 자민당					
서독지역	71.668	68.641	66.283	64.708	62.243
동독지역	106.966	68.619	36.904	29.489	25.749
계	178.334	137.557	103.187	94.197	87.992
Bündnis 90/Die Grüne: 녹색당과 시민동맹 90					
서독지역	40.049	37.533	35.439	37.061	41.072
동독지역	1.267	1.340	881	2.700	2.836
계	41.316	38.873	36.320	39.761	43.908
PDS: 민주사회당(공산당)					
서독지역	600	822	867	1.180	2.326
동독지역	280.282	171.575	145.875	130.226	121.425
계	280.882	172.579	146.742	131.406	123.751

한편 동서독 정당들간의 통합과 재편과정 역시 양지역 주민들의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은 통일 이전 동독사회의 획일주의적 사회구조가 통일 이후 급속히 다원주의화할 수 있었던 데서 추론되는 결론이다. 즉 서독정당제도의 대동독지역 확대로 말미암아 동독지역의 정치제도가 다원주의화할 수 있었으며, 동독지역 사회의 성격 또한 정당제도의 구조적 동질화로 인하여 서독지역 사회와 유사하게 변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독지역 주민의 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동서독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의 이념적 괴리를 극복하는 작용요인이 되었다.

나. 시사점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독일통일과정에서 서독정당들의 역할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일정당 역할의 특징을 남북한 통일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 차원에서 찾아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정당들 사이에 나타난 이념적 다양성과 차별성이 동서독간의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서독의 정당들은 정치이념상으로 동독사회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 배타적이었으나, 동독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에 접근하는 태도에서는 공존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조건부 수용하는 융통성을 보였다. 이러한 정당들간의 차별화된 이념

을 바탕으로 하는 대동독 접근시도는 동서독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양사회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대외외교 측면에서 서독정당들간에 존재하는 이념 및 정책의 다원성으로 인하여 서방편향의 서독 정치체제가 현실주의 및 탈이념적 외교를 전개할 수 있었던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시사점의 하나이다. 독일정당들은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반공산주의 정책, 혹은 공산주의세력과의 공존정책을 이증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중적인 외교정책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에서도 독일정부가 대서방외교 및 대동독, 대소련·동구외교 등을 신축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사민당이 유럽평화 우선정책을 선택한 경우나, 녹색당이 비정치적 이슈를 선택하여 동독사회와의 이념논쟁, 혹은 경쟁 가능성을 피해왔던 사실은 모두 독일정당들이 이념적 다양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가능했던 동서독간 갈등극복 사례였다.

셋째, 서독의 정당들은 통일과정 단계별로 능동적인 역할수행 양상을 보였다.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준비단계에서 독일정당들은 동서독간 통일에 초점을 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독사회의 안정화와 독일 전지역에서의 평화정착에 비중을 더 두는 반통일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통일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독일의 각 정당들은 동독의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구축·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동독 접촉활동을 하였으며, 통일 이후 사회통합 단계에서 정당들의 역할은 동독지역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선도하였다. 이러한

서독정당의 태도는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따라 통일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정권창출의 방법으로 주민에 대해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정당의 활동이 동서독간의 접촉, 교류, 협력을 지속하는 가교가 되었다는 점이다. 동서독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에도 서독 정당들의 다양한 탈이념적 활동이 바탕이 되어 양독간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 녹색당의 환경, 평화, 인권 문제 등과 관련된 활동, 자민당의 양지역 인사 교류 시도 등은 모두 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섯째, 독일의 정당들은 통일문제를 대중화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당들간 정책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민여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들간 선호되는 통일방법에는 차이가 존재였다. 따라서 대중사이에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당들의 정책대안에 대한 지지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독일통일과 통일이후 사회통합단계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될 수 있었다.

여섯째, 서독정당들의 다원적 성격으로 인하여 동독정치체제가 붕괴하는 가운데 발생한 정치세력의 세분화현상을 통일독일 사회가 혼란없이 수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서독정당들의 다양한 이념과 동독사회에 대한 정책 관련 대안 제시는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주민들의 통합독일사회 편입을 촉진하였다.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주민들이 경험하였던 이질적 사회체제에 대한 적응의 어려

움과 불편함의 문제는 독일정당들의 다양한 정책마련에 반영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통일사회의 정치사회적 통합촉진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제Ⅲ장 한국정당의 역할수행 실태

1. 한국정당의 통일을 위한 활동

가. 사회내부 체제유지

한국정당들의 사회내부 체제유지 활동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사회통합기능, 통일정책 결정 참여, 통일교육과 통일전문가 양성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통합기능; 대중여론 수렴¹⁾

건국이래 동서이념대결로 말미암은 분단을 경험해 온 한국사회에서 정당제도의 성립과 발전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反하는 변화는 특별히 시도되지

1) 정당의 사회통합 기능은 주민대중의 여론을 주도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과 대중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들이 제시하는 공약사항을 통해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정당들의 이해의 차이를 살펴 보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결과와 연계시켜 대중여론을 정당이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가 하는 양상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정당들이 다원적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기 위해 선택하는 활동전략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이념적 동질화 및 사회인식의 다원화 수용 문제에 대한 정당의 태도를 통해 사회통합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동서냉전 체제하의 분단구조와 안보위기에 따른 우익보수화 사회경향으로 정당의 활동범주에는 진보와 혁신의 이념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도 오랜시간 동안 「적」으로서의 위치설정 외에는 다른 시각이 없었다. 이 결과로 한국정당의 발전과정에서는 혁신이나 진보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으며, 통일문제나 남북문제를 논의하고 경쟁해야 할 정당구조가 성립되지도 못하였다.²⁾

이념과 체제성격의 보수화 결과로 시민들에게 있어서 당위적인 반공이념과 민족의 분단모순에 대한 과거회귀적인 통일개념은 당연히 異意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을 활동대상으로 하는 정당들 또한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해서 차별적 견해를 제시할 수 없었다. 즉 모든 정당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적의 개념으로만 이해되었으며, 공산주의 이념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이념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통일문제에 관한 한 거의 일치된 견해를 견지한 한국정당들은 대중여론을 취합하고 정책에 반영하

2) 실제로 1990년대 이전(1대~13대 의회회기 동안)에 출현했던 한국정당 중 최소한의 진보성과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정당이 의회의석을 차지한 경우는 2대국회에서 사회당(12석), 민주자유연맹(1석), 2공화국 민주당정부 하에서 사회대중당(4석), 한국사회당(1석), 그리고 5공화국 11대국회에서 한겨레당(1석) 등이다. 김호진, 「한국정치 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2), p. 401 참조; 더우기 이들이 지향하였던 통일 이념과 방법은 반북한의 반공산주의 및 한국주도 통일이라는 한국사회의 합의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수세력과 이념적 갈등을 피하고 있다. 권석충, “한국정당의 통일정책 비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1990), p. 53~55 참조.

는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대중인식에의 영합이나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당의 역할은 대중여론을 주도하는 기능으로서의 사회통합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탈냉전적 변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1990년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자 한국의 정당들은 유권자의 여론을 의식하는 차별화된 견해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시의 통일환경은 6공화국에서의 북방외교 결과로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남북한간에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어 대중의 북한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이었다.³⁾ 따라서 한국의 정당들도 통일·안보정책을 정강이나 선거공약안에 명시하는 과감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타당과의 차별성이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었다.⁴⁾

1992년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의 공약 사항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남북한간 화해협력, 민족의 동질화를 위한 경제·사회공동체 형성, 정치적으로 대북평화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약속하였다.⁵⁾ 이러한 여당의 공약을 따르면 신한국당은 북한의 존재를 적으로만 보지 않고 평화통일의 공동협력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

3)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제 인식 여론조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4) 이미 제5공화국 정부하에서 한국정당들의 통일정책은 남북한간 평화공존에 의한 평화통일을 포함하고 있었다. 권석충, 위의 책, p. 50 참조.

5) 조선일보사,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집, (서울: 조선일보사, 1992), p. 758.

로 이해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민족통일 범국민협의회」 구성과 남북경제협력 적극추진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전면적인 남북교류를 촉진할 것을 약속하였다.⁶⁾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북한을 적의 개념이 아닌 동반자의 위치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민주당의 경계심리가 별로 크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주당은 안보정책 분야에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것과 향토예비군의 복무연한을 30세까지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사항을 제시하여 집권당에 비해 대북한관계를 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⁷⁾ 이는 민주당이 북한을 군사적인 위협세력으로 간주해 온 종래의 한국사회 성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되며, 북한의 존재를 점차로 공존가능한 대상으로 보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제3당으로 출발한 국민당의 선거공약을 보면 민간수준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⁸⁾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위협을 여전히 인지하면서도 통일환경의 변화에 동조하려는 전환기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2년 선거에 즈음하여 나타나고 있

6) 위의 책, p. 759.

7) 위의 책.

8) 위의 책.

는 정당들의 태도는 정치이념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골격을 유지하나, 북한인식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당들간 북한인식 차이의 문제는 통일환경 변화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종래 이념문제와 함께 대북인식에서 보수화·획일화 경향을 보이던 것과 달리 정당들이 통일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려 한 결과이다. 특히 통일·안보문제가 대중의 여론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정당들이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당들의 북한문제와 통일에 관한 인식의 차별화를 선거결과와 비교해 보면, 선거에서는 기존의 대북한 보수적 시각으로부터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였다.⁹⁾ 또한 보수적 시각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견지한 집권여당과 국민당이 선거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얻고 있다.¹⁰⁾ 이러한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면 한국사회에서 북한인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여론을 주도하여 능동적인 사회통합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1996년 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들이 내세운 선거공약에서는 대북한 인식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¹¹⁾ 즉 북한

9) 위의 책, p. 137.

10) 위의 책.

11) 4월 선거이전 시점인 1996년 2월 28일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발표된 4

에 대한 인식의 차별화가 시도되고 있기는 하나, 정당들은 한국 사회에서 획일적으로 우경화된 보수적 시각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경계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은 1994년 8월15일 대통령이 발표한 경축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확인하고, 북한을 「적」과 「이웃」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¹²⁾ 신한국당의 입장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안정화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반면, 북한의 변화는 여전히 한국을 적화하려는 전략을 포기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을 이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한국당의 대북정책 기본방향은 대북한 경계태세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안보논리를 정당화하는 한편, 새로운 통일환경 하에서 북한과의 접촉·교류 혹은 지원을 통해 남북한관계 변화를 동시에 모색한다는 것이다.

새정치국민회의의 대북한 인식은 신한국당의 그것보다 조금 더 진보적이다. 즉 국민회의측은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이며 그 방향은 개방과 개혁일 것이므로 향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낙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¹³⁾ 또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공격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국민회의의 대북정책에 대한

당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이들간의 차이를 살펴 본다.

12) 구본태, “신한국당의 대북정책,”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세미나, 1996. 2.28), p. 9.

13) 이춘근, “한국정당의 통일정책,” (서울: 국민윤리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6.6.28), p. 9.

시각은 보수성을 갖는 바, 대북한 평화적 접근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남북간 평화공존 정책추진의 전제로 안보태세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야당으로의 민주당과 자민련은 대북한인식과 접근태도에서 신중한 대북경계와 평화적 접근을 동시에 이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데서 신한국당과 유사성을 갖는다. 민주당은 한반도내에서 냉전체제 골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은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적대적인 존재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¹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교류·협력의 일방으로 보아 협력과 통일달성의 상대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통일의 당위를 인정하되, 현실의 안보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보수화 성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는 신한국당이나 민주당보다 더욱 보수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북한의 현실이 붕괴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가운데,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은 안보능력 제고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 다만 자민련의 입장은 북한의 조기붕괴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한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 보면 1996년 선거시점에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상대

14) 이삼열, 「북한의 체제위기와 국가안보 통일정책- 96총선전략」 (서울: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안보 및 전략포럼」 회의록 참조, 1996).

15) 이동복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발표문, 위의 회의록 참조.

적으로 북한에 대해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회의가 다른 정당들에 비해 남북한관계 변화를 더욱 긍정적으로 전망하여 대북한 인식에 관한 사회여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시도가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북한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했던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성공적이었던 반면, 국민회의측은 상대적으로 실패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의 한국정당들은 모두 북한을 보는 시각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중여론을 주도하는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중의 시각에 소극적으로 영합하려 한 정당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반면, 1992년 선거에서의 민주당과 1996년의 국민회의 등 대중여론을 주도하려는 태도를 보인 정당들은 선거에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보수화 성향의 한국사회에서 한국의 정당들은 북한 문제와 통일문제에 관련, 적극적으로 사회통합 기능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대체로 다수의 정당들이 통일문제에 관한 한 대중을 유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보다는 대중의 여론에 부합하는 수동적 자세를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정당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모험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¹⁶⁾

16) A. Ware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렴적 정책을 선택하게 되고, 이에따라 정당간 상이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정당의 "position of median voters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A. Ware,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318~330.

(2) 통일정책 결정과정 참여¹⁷⁾

<통일방안 대안마련>

분단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당들은 통일방안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낮아 정책참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¹⁸⁾ 다른 한편으로 시민의 여론향배에 민감한 정당으로서 선거와 같은 정치적 절차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정치체제 안보와 직접 연결되는 통일문제를 언급하는데 신중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통일방법에 대한 언급은 소수의 지식인 중심의 진보적 정치세력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¹⁹⁾ 이슈의 대중화가 이루어져 통일정책에 반영되는 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대중정당 차원에서 통일방법이 처음으로 논의된 사례는 1971년

-
- 17) 정당의 통일정책 결정참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통일방안 제시 및 여론의 정책반영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당들이 제시하는 통일방안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 추진방향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주민의 지지획득에 연결하려고 하였다. 한편, 여론의 정책반영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중여론을 함께 조사하여 정당의 역할을 비교분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대중여론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당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한간 이질화 현상에 대한 정당의 대응활동 등을 정당의 활동무대인 의회를 통한 입법활동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한다.
- 18) 한국정당의 제도화 수준에 대한 평가는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p. 398~399 참조.
- 19) 박순성, 최진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69~74.

야당 대통령후보인 김대중씨가 「3단계통일론」을 거론한 것이었다. 김대중씨의 3단계 통일안은 남북한 사이에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통일과정을 연합단계, 연방단계, 통일국가 단계로 점진적으로 변화·발전시켜 가도록 한다는 주장이었다. 남북한간 협력을 전제로하는 3단계통일안은 당시의 시점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반공 및 반공통일을 언급하던 한국사회 정향과 거리가 먼 제안이었다.²⁰⁾ 또한 이 3단계통일론은 김대중씨가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당시에는 정당간 역할 경쟁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1970년대의 제4공화국 유신시기와 군부세력의 집권이 계속된 1980년대에서는 정당활동이 위축되어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 통일정책은 정부의 본격적인 관심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정당의 역할은 정부에 대한 지원 혹은 비판의 활동에 비중이 두어졌다.²¹⁾

정당의 통일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 정부에 의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된 사실이 계기가 되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진하였던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을 협력과 화해의 대상으로

20) 통일교육단계를 논의하는 경우 1970년 까지의 시기는 극단적인 반공 혹은 반공교육을 실시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최문성, “통일교육의 이념적 지향 - 민족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진주교육대학교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 p. 8.

21) 1982년 발표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발표된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

삼고 있으며,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한 이후 연합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진행한다는 통일의 과정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안은 당시 여당인 민정당의 지지와 선택을 통해 여당통일안으로 정착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당시 야당인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은 각자의 통일방안을 마련하여 여당통일 방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통일민주당의 경우 남북한 접근과정은 기능주의적인 교류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인위적 접근도 아울러 필요하다는 신기능주의적 주장을 포함시켰다.²²⁾

평민당의 경우 김대중씨가 종래 주장해 온 3단계통일안을 발전시킨 「공화국연방제」를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 내용이 포함되어 통일의 방법과 형태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수야당이었던 신민주공화당은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선평화정착 후통일」의 통일추진과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남북간에 정치·군사문제 등의 어려운 부분은 뒤로 미루고 비정치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어 통일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²³⁾

이처럼 1980년대 말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에 따라 정당들 사이에는 잠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슈화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정

22) 박순성, 최진욱, 위의 책 p. 137 참조.

23) 위의 책, p. 138.

당들 사이의 통일논의가 본질적으로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 중심적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통일방법에서도 단계적 접근을 선택하여 유사성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통일논의 양상은 정당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진 후인 1990년대 들어서서도 달라지지는 못하였다. 즉 정당들은 한국사회에서 절대적 명제가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 채, 통일의 단계성 문제와 같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논의만을 내용으로 기존의 통일방안을 재거론하였기 때문이었다.

1992년 선거 중 발표된 각 정당들의 선거공약을 보면,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정부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없이 지지를 보였다. 민주자유당의 선거공약에서는 남북한간 화해·협력을 강조하고, 경제공동체 건설과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김대중씨의 「공화국 연방제」를 바꾼 「공화국 연합제」통일방안 추진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민주당의 「공화국연합제」통일안은 단계적(연합단계, 연방단계, 통일국가 단계)으로 남북한간 경제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달성한 이후 통일을 추진하는 것으로,²⁴⁾ 여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는 통일이념과 체제는 물론 단계성에서도 유사성이 큰 것이었다. 다만 국민회의의 경우 여당의 통일안과 달리 정치군사적

24) 조선일보, 「14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집」, p. 759.

차원에서 남북불가침조약과 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연합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회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 단계설정 및 주한 미군철수 시기 등에서 정부안과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차이점이 정당간 통일방안의 차별성을 유권자들에게 부각시키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선거 준비를 위해 급히 창당된 국민당의 경우 적절한 통일방안은 준비하지 못한 채 통일정책 공약 사항에서 한민족생활권을 강조하여 남북한간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민당의 주장은 내용상 他黨의 주장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다만 우리사회 내부의 이념적 갈등타파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여당보다는 민주당에 가까운 진보적 성격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⁵⁾

한편 1996년 선거에서는 정당구조가 다시한번 변화를 보여 여당인 신한국당과 야당으로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4개의 교섭단체 정당이 참여하였다. 신한국당은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지하였으며, 새정치국민회의는 공화국연합제의 발전형태인 「3단계 3원칙」의 통일방안을 당이 추진하는 공약사항으로 선거공약에 포함시켰다.²⁶⁾

한편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하지 못한 가운데,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

25) 위의 책, pp. 761~762.

26) 3단계는 남북연합단계, 연방제통일단계, 완전통일단계를 의미하며, 3원칙으로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제시한다.

다.²⁷⁾ 또한 자민련은 궁극적으로 독일통일방식에 따른 남한의 흡수통일을 기대하고 있으며, 통일과정은 기능주의 통일방법인 정부의 통일방식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²⁸⁾

결과적으로 1990년대 선거에서 정당들은 각자의 통일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법과 남북한간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들의 통일방안 대안 마련은 정부의 통일정책 결정이나, 선거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정당사이에 통일방안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선거에 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소수 정당(1992년-국민당, 1996년-민주당, 자민련)들이 체계화된 통일방안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통일문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정당들이 유사한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일논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려 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결국 한국정당들에게 있어서 통일방안 선택문제는 구체적으로 통일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기 보다는, 그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부분이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

27) 이부영, “민주당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2.28) 참조.

28) 박철언, “자유민주연합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2.28) 참조.

일이념과 통일체제의 제한적 성격을 이유로 유사성이 큰 통일방안을 함께 공유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입법활동 상황>

한국의 정당들은 통일문제·안보문제와 관련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취합하기 보다는 정부의 제한적인 설명과 정보제공에 의존하여 대국민 정보전달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머물렀다. 이는 통일문제에 관해 정부가 배타적인 위치에서 통일논의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보부족과 인적자원부족으로 인하여 정부와 경쟁적인 위치에서 통일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1990년 이후의 시기에 통일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입법화된 사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1990.8.1), 남북협력기금법(1990.8.1), 민족통일연구원법(1990.8.1) 등의 세가지 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세가지 법률안도 1990년 8월1일 동시에 상정, 입법화된 것으로 정당소속의 국회의원들은 1990년 8월 이후 1996년에 이르기까지 통일관련 입법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정당들이 시민의 여론을 취합, 정책에 반영시키는 사회통합 관련 역할은 통일관련 입법활동을 통해 평가해 볼때 매우 저조했다고 할 수 있다.

(3) 통일교육 담당 및 통일문제 전문가 양성²⁹⁾

정당이 담당하는 통일교육과 통일문제전문가 양성은 정당의 조직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정당들은 통일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정도로 미비한 조직과 인적자원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정당의 통일문제 전문가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정당은 공통적으로 통일문제와 관련한 1인의 당전문위원과 소수의 관심있는 국회의원들에 의존하고 있으며,³⁰⁾ 이들 소수의 의원들과 전문위원 중심으로 정당내 특별위원회 및 국회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규모의 정당조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직상황은 통일정책을 입안하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당들의 통일교육 실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¹⁾ 정당들이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정당원들의 자질향상과 정당지지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정당들의 정당원들에 대한 연수교

29) 통일교육 및 통일문제 전문가 양성 기능에 관해서는 정당의 공청회 활동, 연수행사 등과 당의 조직,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상황(국회 상임위 배정)을 살펴본다.

30) 김종연 신한국당 국제국장 면담(1996.8.8)시 확인 사항임.

31) 필자가 각정당(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에 대해 정규적인 정당원 연수실시 여부를 문의한 결과 어느 정당도 정규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답을 들었음. 신한국당 김종연 국제국장 면담, 국민회의 자민련 당전문위원 전화인터뷰.

육은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으며, 선거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서도 선거후보 개인별 연설회나 행사를 중심으로 선거운동 차원에서 실시되는 홍보활동외에는 정당차원에서의 활동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³²⁾ 다만 특별히 소수의 관심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행사가 통일교육 형태로 실시되고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진행된다.³³⁾

통일문제 전문가 양성 측면에서도 정당들은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당의 조직이 미비한 이유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정당이 전문가를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원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³⁴⁾ 따라서 한국정당의 통일문제 전문가 수용 상황은 통일·외무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속국회의원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일·외무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자주 바뀌고 있어서 해당의원들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외무상임위를 구성하는 의원의 소속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연속적으로 동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13대 후반 임기에 동위원회에 속해 있던 18인의 의원 중 14대 전반기에 다시

32) 필자가 각정당 인사(김종연 신한국당 국제국장, 김은옥 새정치국민회의 남궁진의원 보좌역, 이병우 자민련 당전문위원 등) 면담 및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임.

33) 국회의원회내에는 통일국제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바, 동위원회에서 1996년 후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통일문제 관련 당내행사는 5회이다. 행사내용으로는 공청회 1회, 전문가 간담회 3회, 기자간담회 1회 등이다.

34) 김종연 국장 면담시 확인 사항임.

외무·통일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6인에 불과하였다. 또한 14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16인 의원 중 11인만이 다시 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현재의 15대 임기중에는 14대 후반기 소속의 의원중 단 3인만이 활동하고 있다.³⁵⁾ 특히 13대로부터 15대 임기에 이르기 까지 연속적으로 외무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은 불과 1인에 불과하여 정당내에 통일문제 전문가가 양성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 국회의원의 재선이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경시하고 각자 지역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속상임위를 바꾸기 원하는 데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나. 통일관련 대외외교³⁶⁾

(1) 정당의 외교활동

한국에서 정당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참여는 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공식적으로 정당이 주체가 되어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정당이 주체가 되어 정부

35) 3인은 정재문, 박정수, 이만섭 의원이다.

36) 정당의 통일관련 대외외교 담당 부분을 다루기 위하여는 정당들의 외교정책 정강 분석과 대북한 접촉 상황을 분석하기로 한다. 특히 정당의 대북한 접촉활동은 정당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의 대북접촉을 중심으로 경험적 사례를 취급하도록 한다.

의 외교정책을 지지 혹은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과거 제3공화국에서 월남파병문제를 야당이 직접 반대하고 나선 사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외교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여당이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에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유일하다.³⁷⁾ 야당의 경우는 직접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어 있으며, 의회의 활동이 취약한 상태에 있음으로 인하여 의회를 통하여서도 외교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정당의 외교정책 노선과 관련하여서는 여당의 경우 정부의 견해와 다를 바 없다. 이는 이미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정당의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이 외교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일과 관련된 외교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소수 담당자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이 참여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갖는 외교영역 역시 매우 좁을 수 밖에 없다.

야당이 표방하는 외교정책 노선도 정부의 정책과 차이가 없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야당이 정부와 구별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국론분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³⁸⁾ 더욱이 보수화 성향으로 인하여 야당은 외교정책에서 정

37) 김종연 국장 면담 사항임.

38) 이정희, “외교정책 결정구조,” 이범준·김의곤, 「한국외교정책론」 (서울: 법문사, 1993), p. 170.

부 및 여당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정책노선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야당에게 있어서 외교문제는 선거공약 등에 포함시켜 당의 홍보에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여·야당간의 외교정책 차별성은 세부방안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14대 선거에 참여했던 정당들간의 외교정책 공약을 보면 각 정당의 차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자주·능동외교의 강화를 제시하여, 기존우방과의 외교강화,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북방외교 확대 및 내실화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하였다.³⁹⁾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선진국 자주외교를 강조하는 가운데, 발전도상국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⁴⁰⁾ 국민당의 외교분야 공약 사항에는 민족자존외교와 전방위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미관계와 북방외교의 내실화를 강조하였다.⁴¹⁾

15대 선거를 통해 발표된 정당별 외교노선도 한결같이 21세기를 대비하여 신세계질서 구축 참여를 강조하는 가운데, 대미국·대중국 등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세계화 외교,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정상외교, 유엔에서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정립을 위한 대주변국 외교강화에 초점을 둘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⁴²⁾

39) 조선일보, 「14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집」, p. 758.

40) 위의 책, p. 759.

41) 위의 책, p. 762.

42) 오세용, “신한국당의 외교정책,” pp. 4~5.

제1야당인 국민회의는 통일외교 차원에서 세계각국과의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되, 동북아지역내 안보외교의 비중을 특히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통상관계를 고려하여 민간외교 활성화를 포함하는 실리주의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⁴³⁾

민주당의 외교노선은 신세계질서에 대비하는 능동적인 자주외교 추진과 실리중심의 경제외교 및 한미·한일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⁴⁾

자민련의 외교정책도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강조하고 있으며, 신세계질서 재편구도하에서 한국의 통일과 평화유지 달성에 외교의 최우선 목표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⁴⁵⁾

결국 정당의 대외외교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연유하는 이념적 한계성으로 인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개별 정당의 외교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⁴⁶⁾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내 정당들 사이에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여야간 상호 보완적인 외교정책 수립과 활동은 기대할 수 없었으며,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정당별 독자외교가 추진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당의 외교활동은 정권획득 차원에서 필요로하는 정당활동이 될 수 없었다고 보아지

43) 새정치국민회의, 「'96 국민과의 약속, 제15대총선 300대 공약해설집」 (서울: 새정치국민회의, 1996), pp. 44~47.

44) 이부영, 위의 논문, pp. 32~35.

45) 박철언, 위의 논문, p. 49.

46) 면담 결과, 정당의 개별적인 외교활동은 정당의 지도자나 소속 국회의원들의 개인 방문활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여기에도 정당차원의 독립적인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

며, 대중에 의해서도 외교문제는 정당지지 대상의 근거가 되지 못하였다.

(2) 대북한 접촉활동

북한은 1960년대 이래 남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의 접촉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측의 제안과 주장은 순수한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하지 않고, 남한적화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한국이 이를 수용하기는 곤란한 것이었다. 남북대결 차원에서 북한에 의해 주도되는 남북한 정당 정치인들의 만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정당의 접촉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한 사례로는 1985년 개최된 남북한간 국회회담 예비접촉이었다. 1985년 4월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동시에 개최되는 가운데, 북한측이 제안한 국회회담은 양지역 정치인들이 처음으로 대면한 접촉이었다. 또한 한국사회 내에서는 여·야 정당이 함께 그들의 대표를 국회회담 예비접촉에 참여시킴으로써 통일과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간 국회차원의 정당정치인 접촉은 북한측이 종래 그들이 주장해 온 남북한간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로 인하여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하였다.⁴⁷⁾

47) 김도태, 「남북한 협상행태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990년대에 들어서 남북한 정당정치인이 직접적으로 접촉에 나선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IPU총회에서 양측의 대표들이 조우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양측의 대표들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실제로 남북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인 1990년 4월 사이프러스 IPU총회와 10월 우루과이 IPU총회에서 양측 의원들은 식사를 함께하는 등 우호적인 접촉을 가진 바 있었다.⁴⁸⁾ 또한 여기에서는 남한측이 제의하여 남북한 상호 교환방문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남북한관계가 북한의 핵문제로 경색되자 더이상 IPU총회와 같은 국제회의에서도 남북한간 정치인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남북한간 접촉과 같은 직접적인 정치인의 활동은 남북한 당국간 관계진행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당으로서는 공식적인 외교 혹은 대북활동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2. 정당역할 평가와 문제점

한국사회의 보수화 실상과 이에따른 사회전체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하여 한국정당의 통일과정 참여 역할은 한계를 가지고 있

57~58 참조.

48) 국제회의연맹(IPU) 대표단, 제83차총회 및 146차 이사회(1990.4.2~4.7, 사이프러스, 니코시아) 참가 보고서와 제84차 총회 및 147차 이사회(1990.10.15~10.20, 우루과이, 폰타 델 에스테) 참가 보고서 참조.

다. 특히 한국정당으로서는 이념적으로 보수화되어 있는 대중여론에 대해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통일정책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치적 위협을 수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의 정당들은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다.

한국정당이 통일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소극적 태도를 선택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정당들은 충분히 제도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헌팅턴이 제시하는 제도화의 지표는 적응성, 복합성, 자율성, 응집성 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당들의 제도화 수준을 평가한다면, 한국정당은 역사가 매우 짧아 적응성이 높지 않다. 또한 한국정당은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복합성의 수준이 낮으며, 지도자 개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응집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연고주의, 파벌주의 영향을 받아 쉽게 이합집산하는 경향을 보여 약하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⁴⁹⁾ 따라서 한국정당은 헌팅턴이 지적하는 제도화 제고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이 담당하는 기본 역할은 물론 통일문제에 관해서도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9)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pp. 398~399

둘째, 통일문제의 성격이 종래 냉전으로 말미암아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었으므로 정당들의 이념적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정당들은 선거결과를 중시하여 가장 다수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이념이나 여론방향을 쫓아가기 마련이다.⁵⁰⁾ 한국정당들 역시 선거를 의식하여 여론을 선도하기 보다는 여론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졌으며, 이러한 결과 혁신정당과 진보정당의 출현이 어려운 사회상황에서 보수정당들만의 경쟁이 사회의 다원주의 구조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당의 성격이 사회구성원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표출을 억제하고, 정당의 여론수렴과 정책에의 반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셋째, 정당들간 계층적 차별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이념적으로 右翼保守의 획일적 성향만을 보여 사회내부의 계층화 현상 발생 가능성을 무시해 왔다. 이에따라 정당구조도 보수정당만이 존재해 왔으며, 혁신·진보의 개념은 수용될 수 없었다. 정당의 지지계층 형성도 지연이나 혈연을 중심으로 수평적 집단성에 초점이 놓여 있었으며, 경제·사회적 계층구조의 수직적 성격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성향에 따라 정당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대중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지 못하였으며, 수직적 계층구조 하에서 가시화되는 소외계층을 포용하지 못하였다. 결국 한국의 정당체제는 다원화로 진행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없는 약

50) A. Ware,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pp. 315~326.

점을 갖고 있었다.

넷째, 정당이 통일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의 정당들은 물적토대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통일문제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입안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야당의 경우 정부와의 연계성을 갖지 못하여 정보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당은 대중여론의 수렴능력이 부족하며, 여론의 정책에 대한 반영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의회와 같은 정치제도를 통한 정당의 대정부 기능이 취약하여 정당의 외교활동이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정부외교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비정부차원의 이중적 외교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남북당국자간 대화가 경색국면에 있을 때, 비정부차원에서 정당들이 북한과의 대화 혹은 대북 우회로인 인접국과의 대화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외교활동을 보완할 수 있다. 이는 서독의 정당외교를 살펴본 결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들은 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외교활동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북한과의 접촉도 이루지 못해왔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정당들이 획일화된 이념성향에 따라 정부를 대신하여 다양한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원인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당의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외교활동을 정당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지 않았었던 데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

끝으로 한국정당이 정부와 차별화된 통일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한국정당들은 정부와 구별되는 통일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원과 일반대중을 상대로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이 사회다원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임을 고려할 때, 한국정당은 능동적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제Ⅳ장 통일과정에서의 정당활동 활성화방안

1. 통일과정

가. 통일전 단계

분단이 장기화함에 따라 남북한간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과정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다만 통일과정이 아래와 같은 몇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논리적인 차원에서 통일의 진행과정과 방향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의 전제조건은 통일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통일이 전쟁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평화적 통일의 전제는 이미 한국사회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다. 둘째, 통일의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통일은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통일에 필요한 제반조치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한 사이에 장기적인 동질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통일은 한민족 모두의 번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어느 일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피해를 수반하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의해 합의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같은 합리적 전제조건하에서 추진되는 통일의 과정은 결국 남북한 양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장기적인 시간을 통해 추진되는 통일은 남북한의 변화를 통해 단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통일은 이미 한국정부에 의해 제시되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통일과정과 별다른 대차가 없는 것으로 보여 본 연구에서는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설정하는 통일과정을 차용하여 통일의 미래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일의 과정은 첫째로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단계를 거쳐야 하며, 양자가 함께 통합관리 체제를 운영하게 되는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이후 통일된 국가에서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단계로 구분된다.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단계는 양자간 신뢰를 구축해 가는 단계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르면 여기에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인 공격행위를 중단하며, 경제·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¹⁾ 결국 화해와 협력의 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는 남북한이 상호

1) 통일연수원, 「통일로 가는길」 (서울: 통일연수원, 1996) 참조.

체제안정을 유지하는데 협력하고, 한반도에서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는 체제안정을 위한 민주화를 지속하고 경제발전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간에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체제를 제도화하고, 민족의 동질화를 추진하게 된다. 동질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한편, 정치와 제도의 통합을 위한 남북한간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남북한 공동기구로는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그리고 양지역의 정치인으로 구성될 「남북평의회」와 실무관리자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사무처, 상주연락대표부 등이 포함된다. 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간 상당한 인원의 교류와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통일이후 사회상

남북연합 단계의 심화·발전 이후 남북한 사회는 동질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바람직한 통일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지역 사회의 정치적 통합에 따라 민주와 평등의 가치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법·제도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통일사회가 골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추진된 통일사회에서도 극복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것인 바, 사회 각 분야간에 나타나는 변화정도와 변화속

도의 불균형성은 주민의 가치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가치통합의 기반이 될 정치이념의 적용과 주민들의 자율적 문화구조는 변화속도의 차이로 말미암아 통일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정치체제의 정당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합리적 통합과정을 거쳐 형성된 통일사회일지라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하는 것으로, 통일사회에서는 남북 양지역간 정치이념과 사회문화의 질적차이가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주민의 체제적응에 대한 어려움, 통일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증가 등으로 예상되는 혼란은 통일정부에게 많은 문제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²⁾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정치참여 통로 미확보로 인한 일부 주민의 정치적 소외, 정치체제의 다원적 가치체제 허용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 등이 예상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통일사회의 경제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시민교육 필요성 및 경제적 계층화의 심화가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남북지역 주민들간 갈등의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며, 지역간 계층화 문제, 통일전·후 세대간 갈등문제 등이 나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정부는 국제사회로 부터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참여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바, 외교적으로 국

2) 통일사회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관한 연구로는 박영호·박종철,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김국신·이유진, 「남북한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윤덕희·김도태, 「남북한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등을 참조.

제사회에 대해 통일한국이 평화를 준수하는 비위협적 존재임을 확인시키는 것이 정부의 당면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2. 통일과정 단계별 정당의 역할

가. 정당의 역할수행 준비조건

현재 남북한 사이에 정치적·이념적 대결구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는 매우 좁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대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진행되어야 할 통일과정은 현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당위적으로 정당이 추진해야 할 역할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남북한간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양자의 대결상황을 화해와 협력 양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정치·이념적 대결양상을 변화시켜야 하며,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간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지역 사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당으로서는 현재의 분단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우선 필요하며, 향후 체계적인 정당발전을 이루어 남북사회간 동질성 회복과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제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당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 스스로의 변화와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정당은 종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마땅히 담당해야 할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제도화 제고의 필요성은 물론, 동원자원의 부족과 한국사회의 보수화 성향에 따른 한계성,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과 의회의 기능활성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한국정당의 역할 수행에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한국정당이 통일과정에서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일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당으로서는 통일과정에서의 역할 수행을 국민의 정치적 지지 확보와 집권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은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통일정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정당들은 제도화의 수준을 제고하여 역할수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정당이 담당하게 될 다양한 역할을 적시에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비책이 된다.

셋째, 한국정당들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역할은 정당이 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집권을 목표로 하는 책임있는 정당은 동원자원의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정당들은 통일과정의 점진적·단계적 진행을 이해하여 합리적인 활동방향을 계획·설정해야 한다. 상황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준비로서 정당은 통일 시나리오와 과정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당들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사회 주민의 합리적 인식을 존중하여 정책대안 준비의 전제조건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간 통일이 어느 일방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역할이 정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 정당의 역할

(1) 통일기반조성단계에서의 정당역할

남북한간 통일과정에서 통일기반조성 단계의 의미는 통일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한사회가 갖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으로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한국정당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실천되는 단계이다. 아래에서는 한국사회 내부에서 정당이 실행해야 할 역할과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관계 구축과정에서 정당들이 담당할 역할을 정리해 본다.

<정당의 자율성 제고 노력>

정당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통일정책과 관련, 정당은 정부의 지원조치와 관계없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통일

문제에 관한 전문성과 정책결정 능력을 제고하여 스스로의 역할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통일정책 입안과정에서는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검토와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는 공청회나 세미나와 같은 토론의 기회를 통해 대중의 이해와 평가를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대중여론의 수렴 및 정책반영 기능 강화>

정당은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획득해야 집권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위해 다원주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여론을 합리적인 방향에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은 국민의 여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정당이 선택하는 정책방향이 여론과 배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통일문제에 관해서 정당은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치이념의 수용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당들은 기존에 선택·유지해 온 시각과 구별되는 혁신 혹은 진보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정책으로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신속적인 정당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정당의 이념적 성향이 제한적·경직적인 경우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정치환경을 형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의 정당들이 한국사회의 보수주의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이념적 한계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 대중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발전의 토대가 된다.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 대안 마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통일기반조성단계에서 한국정당들이 추진해야 하는 주요역할의 하나이다. 이는 정권을 창출하려는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와 부합하는 정치활동이며, 나아가 통일을 회구하는 한국사회 대중의 여론을 유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은 타당의 정책과 방안에 대해 차별화되는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통일정책과 방안의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정당이 충분한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은 통일문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당조직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정비는 양성 혹은 확보된 통일문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이며, 이밖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도 하여야 한다.

<정당기반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당들은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특히 정당이 선거에 즈음하여 유권자의 투표성향을 따라 통일정책을 결정하는 행태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본질적 성격에 어긋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는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도출해내기 어려웠던 것이 실상이다. 따라서 통일기반조성단계에서 정당은 그들이 선택하는 통일정책을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당이 주관하는 통일교육은 대중지지 획득수단이 된다. 시민들의 통일문제에 관한 이해를 정부의 통일교육에 의존하는 한, 정당(특히 야당)에게 요구되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없다.

정당의 통일교육은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정당원을 위한 연수기회의 확대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당정책 홍보활동 강화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특히 시민교육 차원에서는 정당전해를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세미나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여 주민여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간 정치인 교류 추진>

남북한간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간 정치인의 교류는 정당이 실천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정당이 통일문제를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남북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당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치분야에서는 IPU와 같은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의 정치적 인물과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남북간 갈등을 고려할 때 북한인사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당은 비정치분야에서의 대북접촉을 우선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당내의 특수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선발

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정치 분야에서 대북 人的接觸을 시도할 수 있다. 접촉과 교류의 내용도 종래 남북간에 추진되어 온 각종교류(문화, 예술, 학술, 종교, 경제, KEDO내의 참여 등)를 중심으로 하되, 전문성을 갖는 정당정치인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외교를 보완하는 정당의 이중적 외교활동>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통일기반조성단계에서 정당은 한편으로 정부에 대한 협조적 외교활동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분단상태에서 북한과 미묘한 외교적 대결을 경험해 온 한국정부로서는 이념과 체제 경쟁에 따라 여러 부분에서 북한에 의해 견제를 받아왔다. 따라서 정당은 정부가 경험하게 되는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정부를 대신하여 해결하거나, 정부차원의 외교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대외활동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정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이념의 폭을 넓혀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때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정당이 한국사회 내의 다양한 견해를 외교적 측면에 반영시킬 수 있을 때 정부의 외교에서 나타나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정당의 외교활동은 정치인의 개인별 외교활동과 정당차원에서 외국정당과의 자매결연 혹은 공조활동을 통한 부분 등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외국정당과의 정책적 연계활동 및 교류

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정당의 외교활동 내용에는 정부의 외교 정책 지지만이 아니라 대안적 입장에서 외교를 전개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2) 통일추진과정에서의 정당역할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북한사회가 다원주의 구조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것이며, 남북한간 교류는 상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활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정당의 역할은 한국사회 내부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대북한 사회활동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통일기반조성단계에서 정당이 수행해 온 역할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통일추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당의 역할만을 추가로 제시하기로 한다.

<통일의 정당성 제고를 시민교육 실시>

남북연합단계는 남북한간 접촉과 교류가 본격화되어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로의 진행을 위한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통일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북한이해에 대한 논의가 증대할 것이다. 이에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을 정당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제고될 것이며, 정권을 창출하는 책임을 갖는 정당들은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남북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시민 통일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남북연합단계에서 추진될 정당의 통일교육은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 남한시민사회 내에서의 통일논의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비하는 방안이 주요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은 전문가 중심의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통일지지 의사를 유도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당은 시민행사 실시와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정당내 행사담당주체는 중앙조직 만이 아니라 지방단위 정당조직이 주도하여, 소규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추진과정을 담당할 통일전문인력 양성>

남북연합단계에서도 정당은 통일추진 과정을 담당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연합단계에서는 이미 정치와 군사문제 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및 예술 등 제반분야에서 총체적인 대북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며, 상호 협조와 협력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차원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인력의 운용을 위해 당조직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사회의 이질성 포용을 위한 정치이념 수용폭의 확대>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 관계는 이데올로기적 대결구도를 벗

어난 상황이므로 정당들은 정치이념만이 아니라 인권, 환경, 산업화, 사회복지 등 제반 분야에서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은 정부 및 타당과의 이념적 차별화는 물론 북한의 이질적 사회체제에 대해 접근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체제는 기존정당의 보수적 성향과 함께 진보와 혁신의 이념을 수용·발전시켜 사회의 안정화를 모색하여야 하며, 특히 남북 양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남북 각지역 내의 다원적 사회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이념적 포용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정치조직간 교류·협력 확대>

남북연합단계에서 양지역 정부간에 합의하여 운영될 남북평의회와 같은 정치기구에 대해 한국의 정당들은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치제도의 정착은 물론 남북한간 정치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평의회에 참여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남한 정치제도의 특성을 북한정치인에게 이해시키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북한의 인사들에게 남한의 다당제를 이해시키고 남북 정당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북측에 다수정당의 출현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대북접촉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정당 지원>

남북연합단계에서 북한사회 내에는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획일성이 정당화되지 못하고, 공산주의 정치세력의 독점적 사회지배에 대해서도 변화요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들에게는 북한지역에서 제기될 다원주의적 사회구조를 지원·발전시키는 활동이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의 정당들은 북한사회 정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은 물론, 다원적 사회세력 혹은 정치조직의 政黨化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 혹은 사회세력의 정치집단화 이후의 정치활동 지원을 통해 북한사회가 건전하고 정상적인 다원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통일을 대비하는 최우선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치집단에 대한 지원은 정치자금 및 조직운영 방안의 지원·제시와 함께 선거와 남한사회에서 실시되어 온 입법활동 등의 정치활동 경험을 제공·공유하는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대북한주민 홍보활동 강화>

정치인사들간의 교류 및 접촉이 가능해지는 경우 남북연합단계에서 요구되는 또 하나의 정당활동으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통일교육을 들 수 있다. 남북한간 정치교류를 담당하는 정당으로서는 남북간 접촉이 양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대중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통일의 교량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남북연합단계로부터 통일로 진행되는 통일과정에서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피하려는 한국정부로서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 시도는 물론 정치적 홍보활동 조차 매우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를 대신하여 한국의 정당들이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일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홍보함으로써 통일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교육활동은 통일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시켜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이 된다.

<통일의 당위성 홍보를 위한 외교활동>

남북연합단계에서 한국정당들은 정치이념의 폭을 넓혀 남북간 이념적 갈등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상황을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당의 외교활동은 자율성을 가지고 남북한 주민들의 지원하에 실질적으로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에 정당은 남북한간 자주적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변국에 대한 한반도 상황을 홍보하고, 이들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주체적 활동이 가능하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여당의 경우 정부의 입장을 지원해야 하나, 야당의 경우 집권을 위해 대안을 선택하여 주변국 및 제3세계 외교를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통일한국사회에서의 역할

정치제도적 통일이 달성된 후에도 남북지역사회 사이에는 이질적 요소들이 동질화되어 명실상부한 하나의 통일사회를 형성하게 되기까지 상당한 사회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사회가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는 통일의 후유증과 새로운 사회건설 과제들은 정당에게도 많은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문제와 새로운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과제들과 관련, 통일사회에서 정당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통일사회 발전방향 대안 제시>

정당은 통일을 달성하기까지 남북한 사회가 각자 수행해야 할 역할을 통일방안에 포함시켜 정당의 통일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통일이후에는 통일방안을 대신하여 통일사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활동 역시 통일사회에서 정당이 담당해야 할 역할의 하나가 된다. 정당의 대안마련 활동에는 개헌안 준비 활동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통일사회내 갈등 조정>

통일사회에서 정당이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 중 또 다른 하나는 다원주의 사회구조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중의 이념적 혼란과 갈등을 조정·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정당이 통일사회의 이념적 동질화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이념을 수용하되,

이를 수렴시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통일이후 사회에서 예상되는 남북지역간·계층간 이념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대중의 이익표출을 유도하는 한편, 표출된 여론의 취합능력을 제고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합리적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취합능력 제고를 위해 정당은 분권적 운영으로 하부정당조직을 활성화시키거나, 다른 한편으로 소규모의 지역정당과 연합하는 정당연합구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단위지역 주민의 정서와 전국규모의 정당정책 사이에 상호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괴리가 발생할 때 타협가능한 방법이며, 소외되는 지역주민의 자율성보장과 중앙정치무대로의 의견반영을 가능하게 하는 차선의 대안이 된다.

<북한주민 정치참여 활성화 유도>

통일이후 한국정당이 담당해야 할 역할중에는 정치적으로 소외될 일부의 북한주민을 위해 정치참여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도 포함된다. 즉 정당의 활동은 통일사회 전주민이 정치조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의 동질화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정당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남북지역간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활동으로 북한주민의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을 비중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정당들이 통일사회

에서 북한주민의 정치참여를 돕기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는 지역 단위의 하부정당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보완적 대안으로 북한주민들의 이익을 조정·보장해 줄 이익단체 및 비정치조직들에 대한 지원과 연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엘리트 충원>

정당조직의 정비와 확대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정당역할은 정치엘리트 충원이다. 통일사회에서 정치이념과 체제성격은 과거의 남북한 분단시의 정치체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새로운 인물을 충원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획일적인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참여정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북한지역 주민들에게는 통일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훈련된 정치대표들을 선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독립성을 유지하게 될 북한지역에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엘리트 충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통일이 달성된 이후 통일정부하에서 훈련된 정치엘리트를 적절하게 충원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사회에서 정당이 긴급히 정치엘리트 충원기능을 수행하기 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은 물론, 충원기능을 수행할 단위지역의 정당조직 정비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들에 의해 신망받는

인사들을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발굴·지원함으로써 정당의 충원 과정에 합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통일사회내 시민 사회화 교육 실시>

통일사회 주민들의 시민교육도 정당이 참여해야 할 역할이다. 통일사회에서는 정치체제는 물론 경제·사회구조도 통일이전의 남북한 사회와 다를 것이므로 주민들이 통일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민교육이 중요하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체제에서 시행되는 정치적 절차와 과정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북한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치참여를 위해 실시되는 시민정치교육은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정당으로서는 직접 주관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그리고 정당연수 프로그램의 실시 외에도 각종 정치집회를 시민교육 기회로 이용하여 계몽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활동을 담당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것도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시민교육 방법이다.

한편 비정치분야의 시민교육도 정당이 부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는 정당이 집권을 위해 제시하는 정책이나 공약이 경제와 사회 등 사회 全分野에 걸치게 되므로, 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다. 즉 정당의 비정치 분야 관련 정책을 주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을 함께 교육시킬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당이 실시하는 시민교육은 통일이후 북한지역 주민들

이 새로운 정치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적 정치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주민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비정치분야의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의 정당성 홍보를 위한 대외외교 활동>

통일추진과정 및 통일이후 사회에서 발생할 정치이념의 다양화에 따라 국내적으로 정당들간에는 경쟁이 심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외교정책에서 타정당 혹은 정부와 차별적 양상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통일사회에서 정당의 대외외교 활동이 국제사회에 대해 통일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노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사회에서 외교활동의 기본방향이 통일사회의 조속한 안정화임을 고려할 때 정당의 외교활동은 단기간이나마 정부의 외교행위에 도전하는 양상보다는 보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분야가 정부의 배타적인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정당은 비공식적인 인사교류와 국제행사 참여 등, 비정부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제 V 장 결 론

최근 북한은 경제적 곤란과 주민의 사회일탈행위 증가로 체제의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안정화 문제는 북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한 지원·협력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한 후 점진적인 통일을 모색한다는 정부의 통일방안은 그 합리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통일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발전이 전제가 되는 바, 한국사회에서는 다원화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체제 형성이 발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사회가 상호 이질적인 정치이념과 경제·사회 구조를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자간 이질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원적인 사회체제의 구성과 운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주의 사회로의 발전과정은 통일의 첫걸음이 되며, 통일에 대한 개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대중의 통일과정 참여와 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통일촉진의 중요요인이 된다.

한국사회발전과 통일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정당의 역할은 통일추진 과정에서 점차로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내 특정 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다원주의 정치체제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다수 정당의 존재와 활동은 다양한 대중여론의 표출과 조정에 필요한 조건이며, 통일추진과정에서 남한사회가 다원주의 구조를 심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수단이 된다.

실제로 통일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입증된 바 있다. 서독의 정당들은 사회내부의 다양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여 사회통합 제고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대동독접촉 활동과 서독정부의 대외정책 집행과정에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독일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정당의 역할은 사회통합과 대중여론수렴, 그리고 통일교육과 전문인력양성, 대외활동 등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이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은 물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탈냉전의 국제환경 변화, 전쟁거부와 평화애호의 국민적 선택, 체제안정화를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그리고 남한사회의 성공적 발전과 이에 따른 남북한간 협력가능성 증대 등 다양한 요인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은 단순히 동일민족 정서에 의해 요구된다기 보다는 남북한사회 주민의 현실적인 이해와 합리적 사고의 결과로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당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통일

기반 조성단계에서 요구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진행될 통일과정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활동계획을 준비할 시점에 와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정당들은 한국사회 발전을 선도해야 함은 물론,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당의 역할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하는 당위적인 우리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당들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필요한 준비조건들을 만족시켜 남북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한국의 정당은 통일이 라는 과제가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며, 통일과정이 정태적인 상태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상황인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의 발전은 대중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의 개발이나 시민교육 등을 통해 대중의 정당지지를 유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한국의 정당들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통일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통일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을 고려하여 정당의 역할은 신속적으로 상황변화에 부응하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정당들은 향후 담당할 역할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국신·이유진. 「남북한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김도태. 「남북한 협상행태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일무. 「독일통일과 남북한통일」. 서울: 대왕사, 1995.
- 김영운 외.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2.
- 박순성·최진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영호·박종철. 「남북한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윤덕희·김도태. 「남북한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이범준·김의곤. 「한국의외교정책론」. 서울: 법문사, 1993.
- 이영호 외. 「현대정치과정론」. 서울: 법문사, 1978.
- 이우영.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조 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조선일보사.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집」. 서울: 조선일보사, 1992.

최한수. 「현대정당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3.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_____. 「독일통합실태연구」. 서울: 통일원, 1992.

Beyme, Klaus von. *Das Politische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Vereinigung*. Munchen; R. Piper & Co. Verlag, 1979.

Duverger, M. *Modern Democracies: Economic Power Versus Political Power*. translated by Charles L. Markman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4.

_____. *Political Parties*. translated by Barbara & Robert North. London: John Wiley & Sons Inc., 1963.

Epstein, Ledn D. *Political parties in Western Democracies*. NJ: Transaction Press, 1980.

Gabriel, Oscar W. *DIE EG-STAATEN IMVERGLEICH*. Westdeutscher verlag GmbH, Opladen, 1992.

Lipset, Seymour Martin. *Political Man*. New York: Doubleday, 1960.

Panbianco, Anpelo.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Pulzer, Peter. *Germ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Plock, Ernest D. *East German- West German Relations and The Fall of The GDR*. Boulder: Westview Press, 1993.
- Sartori, Gidvanni. *Parties & Party System*. 어수영 역. 「현대정당론」. 서울: 동녘, 1995.
- Ware, A.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2. 논 문

- 구분태. “신한국당의 대북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2.28.
- 권석충. “한국정당의 통일정책비교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 박철언. “자유민주연합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2.28.
- 오세응. “신한국당의 대외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2.28.
- 이부영. “민주당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2.28.
- 이춘근. “한국정당의 통일정책.” 국민윤리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6.6.28.

Nidermayer, Oscar. "Party System Change in East Germany."
German Politics, vol.4, no.3, December 1995.

3. 기 타

새정치국민회의. 「15대총선 300대 공약해설: '96국민과의 약속」.

서울: 새정치 국민회의, 1996.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안보 및 전략포럼 세미나 회의록」. 서

울: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6.

통일연수원. 「통일로 가는길」. 서울: 통일연수원, 1996.

국제회의연맹(IPU)대표단. 「제83차총회 및 146차 이사회(1990.4.2
 ~4.7, 사이프러스, 니코시아) 참가 보고서」.

「제84차 총회 및 147차 이사회
 (1990.10.15~10.20, 우루과이, 폰타 델 에스테) 참가 보고
 서」.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北韓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 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值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 96-10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96-15 통일과정에서 정당역할 연구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안보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일본총선 결과분석
- 96-09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研究報告書 96-1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1-4304
印刷處 성진문예사 전화 : 273-5577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